

2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발표

- (내용) 기획예산위원회는 7월 3일, '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'을 확정, 발표하고, 즉각 시행하기로 함
- (영향) 민영화의 추진 방식에 따라 해당 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의 경쟁력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, 주식시장 불안정의 심화와 민간 기업 구조조정의 차질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
- (문제점) 민영화 정책 추진 주체의 혼선,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효과 불투명, 노동조합과의 갈등 미해소 등의 문제가 있음
- (과제) 민영화 정책 추진 주체의 일원화, 공공성 확보 및 물가상승 규제 수단 필요, 공정거래법과의 조화, 민영화와 동시에 경쟁 체제의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함

□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주요 내용

- 이번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추진 원칙은 다음과 같음

-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민영화하여 주인 있는 책임경영 실현
- 조기 민영화가 곤란한 경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민영화
- 매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각 방법 및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
- 공정성과 투명성 견지
- 우리사주 및 국민주 기회 제공

- 기획예산위원회는 7월 3일, '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'을 확정, 발표하였음

- 포항제철, 한국중공업, 한국종합화학, 한국종합기술금융, 국정교과서 등 5개 공기업과 그 자회사 21개사를 7월중에 민영화하기로 함
- 또 한국통신, 담배인삼공사, 가스공사, 대한송유관공사, 지역난방공사 등 6개사는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함
- 이를 통해 99년 말까지 80~100억 달러의 외국 자본 유치에 기대함
- 매각 방식은 지분 및 자산 매각, 교환사채 발행 등이며, 국내외 기업에게 동등한 자격을 주기로 함
- 한편 공기업 민영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「공기업 민영화 추진 기획단 (단장: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)」을 구성, 운영하기로 함

- 이어서 7월 중순까지 단계적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자회사 31개사를 포함한 2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 및 통폐합 등 구조조정 대상 공기업을 확정할 계획임

<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>

공기업	주요 고려 사항	민영화 방안
포항제철	- 지분 조기 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화 추진	- 정부, 산업은행 지분 26.7%를 1인당 3% 이내로 매각 - 2001년말 외국인 투자 한도와 동일인 소유 한도를 폐지
한국중공업	- 발전설비 공급 독점 해체에 따라 경쟁력 제고 필요	-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 - 우리사주에 일부 주식을 매각
한국통신	- 경쟁 체제 확립	- 2000년까지 신주 10% 내외를 세계적 통신업자에게 매각해 전략적 제휴 - 국내 증시 조기 직상장후 해외 공모나 우리사주 등을 통해 국내 매각 - 2001년 이후에는 나머지 정부 지분 33.4%를 국내외 여건을 고려, 추가 매각
담배인삼공사	- 민영화 및 경쟁 체제 도입으로 효율성 제고	- 2000년까지 35.3%의 정부 지분 및 은행현물출자분 매각
한국전력공사	- 해외 차입시 계약 조건 문제로 정부 지분 51% 이상 유지 필요	- 발전과 송배전 부문을 분리해 발전부문부터 조기 민영화 - 정부 지분 5% 매각
한국가스공사	- 경쟁 여건을 조성하면서 단계적 민영화	- 98~99년에 2,500억 원 규모로 증자한 후 2002년까지 민영화 완료

□ 공기업 민영화의 경제적 영향

- 민영화 방식에 따라 해당 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의 경쟁력 제고 효과가 크게 달라지게 됨
 - 외국 자본에 매각되어 국내 민간 기업이 진입하기 이전에 외국 기업에 의해 독점 체제가 형성되면, 국내 기업에 의한 해당 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의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
 - 반면 민영화와 동시에 경쟁 체제가 도입될 경우, 해당 공기업의 효율성은 물론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까지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

- 또한 소비자 후생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 - 특히 해당 부문의 공공성 약화를 가져와 공공요금 등의 가격 인상의 가능성이 있음
 - 그러나 경쟁 체제를 효과적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기, 가스, 전화 등의 실질 요금이 하락할 수도 있음
- 공기업 주식의 대량 투입으로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거나, 민간 기업의 구조조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
 - 현재와 같이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고 신용경색인 국면에서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음
 - 또한 기업 매매시장에 대한 공급 초과 현상을 가져와 민간 기업의 구조조정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있음

□ 1차 공기업 민영화 방안의 문제점

- 민영화 정책 추진 주체가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로 이분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
 - 현재 민영화 정책은 전반적인 계획 기능은 기획예산위원회가 담당하는 반면 최종 결정은 재정경제부와 협의 후에 이루어지는 체제임
 - 이로 인해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, 해당 공기업의 노동조합 등 이해 당사자들에 의한 로비 및 이들과의 조정이 어려워져, 민영화 정책이 애초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큼
 - 애초 정부 조직 개편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을 전담할 부서는 기획예산위원회로 일원화되어 있었으나, 이와는 별도로 「공기업 민영화 추진기획단」을 구성함으로써 오히려 정부 조직의 비효율화를 자초하게 됨
- 일부 공기업의 경우, 민영화 방식의 미비로 그 효과가 불투명함
 - 일부 공기업은 1인당 매입 가능 지분이 3%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, 민영화 이후 경영권 행사에 혼란이 예상됨
 - 또한 민영화로 인해 시장 구조가 단순히 공공 독점에서 민간 독점으로 이행하는 경우도 있어, 독점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것임

- 노동조합과의 갈등 미해소로 적극적인 추진을 어렵게 함
 -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자와의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영화를 단행할 경우, 노사정위원회 탈퇴 및 파업 강행 등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음
 - 이러한 마찰은 민영화 자체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, 여타 부문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

□ 개선 과제 및 대응 방안

- 민영화 정책 추진 주체의 일원화가 절실함
 - 실무적인 차원에서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으나, 정책 추진의 주도권을 잃어서는 곤란함
 - 따라서 당초 새정부의 구상대로 기획예산위원회가 민영화 추진 계획 수립, 대상 선정, 방식 및 시기 결정 등 모든 부문에 전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함
- 공공성 확보 및 물가 상승 규제를 위한 수단이 필요함
 - 민영화로 인해 공기업이 가지고 있던 공공성 확보 방안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
 - 영국의 사례에서처럼, 물가 인상을 감독하는 임시 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
- 전반적인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과의 조화가 필요함
 - 대상 공기업이 동종업종의 민간 기업에게 매각되는 경우에는 독과점 문제, 이종업종 민간 기업에게 매각되는 경우에는 다각화의 문제가 발생함
 -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독과점도의 증가 혹은 산업정책의 핵심인 전문화에 위배되는 다각화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 천명이 필요함
-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민영화와 동시에 경쟁 체제의 도입이 바람직함
 - 분리 매각이 가능한 공기업은 분리 민영화를, 성격상 분리 매각이 불가능한 공기업의 경우에는 민간 기업에 의한 시장 진입을 허용하여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함

(과 용 선 yskwak@hri.co.kr ☎724-4058)